

소비심리 회복, 쉽지 않다

경제연구실 김진성 실장 jinskim@woorifg.com

올해 들어서도 연이어 안팎으로 경제전망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올해도 지난 해와 다름없는 낮은 수준의 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외여건은 여전히 어렵고 내수활성화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국내 가계의 소비성향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약세, 가계부채의 증가와 맞물려 단순히 과도한 심리위축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소비심리의 위축은 정체된 소득뿐 아니라 자산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 감소와 주거비 상승, 교육비 등 자녀부양부담 증가, 급속한 고령화와 부족한 노후대비 등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식의 전환이 후행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소비심리는 상당기간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도 국내외 경제는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경기흐름이 예상

지난 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을 수정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각각 3.5%, 3.7%로 기존 전망에서 각각 0.3%p 낮추었다. 지역별로도 주요국 가운데서는 미국과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다. 새해에 들어서도 국내외 경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1월 첫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3.9%에서 3.4%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지난해 GDP성장률(속보)이 3.3%였음을 감안할 때 소득의 증가, 그리고 경제의 활력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여건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경기의 ‘회복’보다는 ‘낮은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더불어 2012년 2.3% 이후 2013년 3.0%, 2014년 3.3%로 성장률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든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대외여건 악화로 내수활성화 필요성은 더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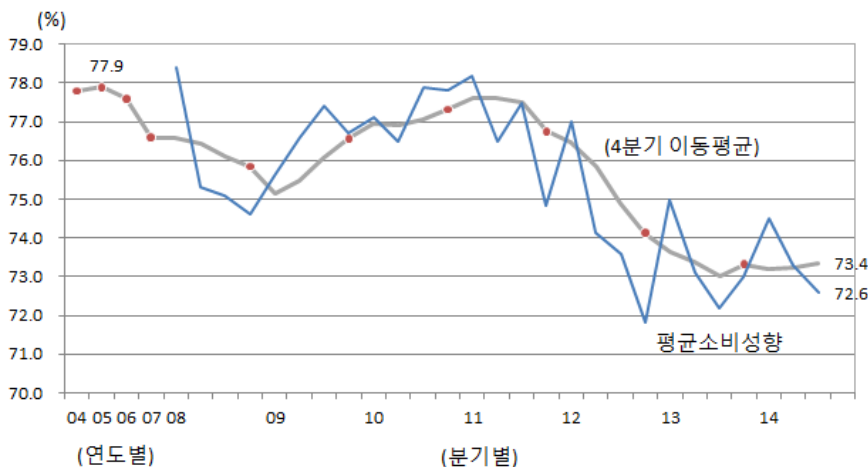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경기회복, 경제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외수요여건이 낙관적이지 않음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저조한 성장마저도 많은 부분을 내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런데 기업이 주도하는 투자의 경우, 대내외 수요전망이 불투명한 가

운데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 본연의 생리를 부정할 수 없고, 일면 투자부진이 장기화될수록 정부가 내놓는 당근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서두를 이유도 크지 않다.

한편, 국내 소비부진이 낮은 소득증가세 등 경기요인 외에도 급속한 인구고령화, 소득불균형 심화, 교육 및 주거비 등 고정비 성격의 지출부담 증가 등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제들이 강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는 심리’라는 표현을 들어 최근의 소비부진을 일시적이며 과도한 심리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과연, 마음만 바뀌면 소비가 늘어날 것인가?

소비부진이 소비심리의 과도한 위축의 결과인가?

전국 가구(2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 추이



주: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가계소득-비소비지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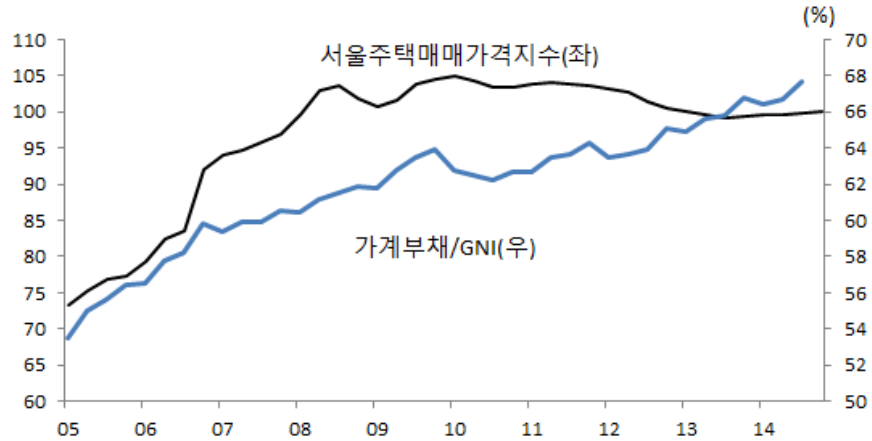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1~3분기) 전국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3.5%로 2013년 73.3%에 비해 소폭 높으나 계절적으로 4분기 소비성향이 1~3분기 평균보다 낮음을 감안하면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계열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11년부터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2013~2014년 2년 연속으로 73%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동일한 처분가능소득에도 소비로 지출되는 비중이 줄었음을 의미한다.

평균소비성향 2년째 73%대

과거 비소비지출(사회보험료, 비경상조세, 공적연금기여금, 이자비용 등)의 가파른 증가로 인한 지출여력 둔화, 즉 처분가능소득의 낮은

증가가 소비 제약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 소비지출의 증가세가 소득증가 속도와 비슷하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증가세는 더 부진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GNI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서울주택매매가격



자료: 한국은행, 국민은행

소비심리 위축의 고착화 가능성

여기에는 분명 소비심리의 위축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나 소비성향의 하락폭과 기간, 그리고 본격적인 소비위축 시점을 감안하며 일시적인 경기요인 보다는 소비심리 위축의 고착화, 또는 소비지출구조의 전환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소비성향의 하락과 반등을 경기요인에 따른 소비조정으로 본다면, 2011년 이후 소비성향의 하락국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약세, 그리고 소득 대비 가계부채부담의 재상승 시기와 맞물려있다. 이는 가계자산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가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짐에 따라 주택 및 부채 보유자들이 정체상태에 있는 경상소득의 지출을 조정할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추정된다. 또한 주택시장의 약세는 전세 공급을 감소시키고 월세로 전환할 유인을 제공하여 주택임대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는 임차가구의 소비여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부채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거비 부담이 커졌을 뿐 아니라 예상되는 연금개혁과 노후대비의 부족, 교육비 등 자녀부양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 등은 현재의 경기상황과 별개로 소비행태를 조정하도록 하는 압력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소비심리의 위축은 경기흐름 및 자산시장 움직임에 따른 일시적 비관이 아니라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그리고 가계의 재무상황 변화에 대한 뒤늦은 각성과 이에 따른 가계지출구조의 전환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초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부동산시장 관련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주택매매의 정상화, 임대시장의 안정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소비심리 및 소비지출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소득이 늘지 않는 가운데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부채는 더 증가하는 상황, 저물가로 인해 실질구매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하나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고비용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면, 지금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심리의 위축이 단순한 Sentiment가 아니라 냉철한 상황판단과 Fact에 의한 조정이고 인식의 전환이기 때문이다.